주간통일정세 2009-02(2009.01.05~2009.01.1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02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北김정일, 원산청년발전소 방문(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롭게 건설된 강원도 원산청년발전소를 시찰하고 수력발전소 건설에 계속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새해 들어 군부대 2곳을 시찰한 데 이어 3번째 공개활동으로 이 발전소를 찾아 "강성대국"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자며 지난해말부터 내세워온 "혁명적 대고조"를 거듭 강조
- 김 위원장의 원산청년발전소 방문에는 리철봉 강원도 당책임비서, 장성택 당 중앙위 부장, 리재일 당 중앙위 제1부부장,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 등이 수행했으며, 현지에서 박정남 강원도 당위원회 비서와 로길종 강원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영접

  * 북한 언론매체들은 종래 김 위원장의 경제시설 시찰 때는 거의 반드시 "현지지도"라고 표현했으나 2008년 연말부터 "방문"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음.

  * 청년발전소는 평양-원산간 관광도로 사이의 무지개동굴 평양쪽 입구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36㎞ 떨어진 곳에 건설됐으며 1호기는 4만㎾, 2호와 3호기는 각 6천㎾, 4호기는 8천㎾ 등 총 6만㎾의 발전능력을 갖췄음.

김정일 연초 잇따라 군부대 시찰(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인민군 포병사령부 산하 제1489군부대를 방문해 포사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김 위원장의 포병부대 방문은 새해 첫 공개활동으로 북한군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시찰한 데 연이은 것임.
- 김 위원장은 포병사령관인 리정부 상장 등의 영접을 받아 부대 실태를 보고받고 포사격 훈련을 지켜봄. 그의 시찰엔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 대장과 현철해 김명국 대장,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사회부문 간부들이 수행

나. 정치 관련

北, 日총리 방한으로 남북관계 더 파국 주장(1/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일본을 등에 업고 어디로 가려는가'라는 제목의 글

에서 이날부터 시작된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의 방한에 대해 "남조선의 보수당국과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북한)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가뜩이나 악화된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떠미는 부정적 후과(결과)를 빚어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

통일신보, 이 대통령 국정연설 비난(1/10, 통일신보; 1/11, 우리민족끼리)

- 통일신보는 10일 남북관계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월2일 국정연설을 북한 매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거론하면서 "동족 대결책동이 새해에 들어와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 통일신보는 이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남북관계를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점은 "북남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올해에도 범죄적인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지속시키려는 기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

최승철, 양계장에서 혁명화 교육 중(1/11, 연합)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판단 실책 등의 책임을 지고 2008년 해임된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최승철 전 부부장이 황해도 지역의 한 닭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그가 대형 양계장격인 황해도의 '닭공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그가 계속 그곳에서 있을지 통일전선부로 복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 그의 복귀 가능성과 관련, 소식통은 "혁명화 교육을 받은 지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복귀 가능성을 점치기 쉽지 않다"며 "그동안 다른 사례에 비춰 보면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임.

평양대학생들, 천리마제강 방문(1/10, 조선신보)

-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1950년대 천리마 운동을 계승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강조한 가운데 평양의 대학생들이 '천리마의 고향'으로 불리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직접 방문, "천리마 기상"을 배우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0일 보도
- 신문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새해 벽두부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사회정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면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김형직사범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미술대학 등에 재학 중인 평양의 대학생들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천리마의 고향으로 불리는 강선(천리마제강의 옛 이름) 땅을 찾고 있다"고 보도, 특히 5일 신년 공동사설을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가 열린 이후 "기업소를 찾는 대학생들의 수가 급증했다"고 신문은 보도.

北, 공동사설 관철 결의대회 전역 확산(1/9, 연합)

- 북한에서 신년 공동사설이 제시한 과업의 관철을 다짐하는 군중대회가 평양을 시발로 전역에 확산, 지난 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영일

총리,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중린 당 중앙위 비서 등 고위 당·정간부들과 시민 10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군중대회가 열린 데 이어 6일엔 자강도, 황해남도, 강원도, 량강도에서, 7일엔 평안남·북도, 황해북도, 함경남도에서, 8일엔 함경북도에서 군중대회가 열렸음.

- 중앙과 도 단위 행정조직을 동원한 군중대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결의대회는 시·군 단위와 각급 기업과 협동농장, 사회단체로 확산중
- 이들 궐기대회에선 지난해 말 김정일 위원장이 방문,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는 데 선봉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이 궐기모임에서 채택한 '전국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단골로 소개

○ 北 강경파 입지 잃은 듯(1/8,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 1/9, 연합)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복귀하면서 강경파가 입지를 잃은 것 같다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8일 보도
- 신문은 중국 선양(瀋陽)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말을 인용, "김 위원장의 와병 기간에 그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등 강경파가 득세했으나 최근 수일 사이 장성택 부장이 당 내부에서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면서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은 김 위원장의 복귀와 강경파에 의한 과도통치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
- 신문은 장성택이 몇 년 전부터 생겨난 자유시장을 한 달에 3일만 열도록 하고 50세 미만 여성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적대정책을 강화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북한식 네오콘'의 부상은 "김 위원장의 재등장에 따른 개각 등 최근의 사태전개로 과거의 일이 됐다"고 설명

○ 천리마운동 선구자는 南출신(2008년 10월호, 조국; 1/8, 평양방송)

- 북한 언론매체들은 북한 당국이 최근 다시 꺼내든 1950,60년대 천리마운동의 '선구자'로 남한 출신의 진응원씨를 내세우고 있음. 월간 '조국' 2008년 10월호 등 북한의 각종 매체들에 따르면 고향이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노탑리인 진씨는 6.25전쟁 때 북한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을 때 북한군에 입대했다가 국군에 포로가 됐으나 포로교환 때 북쪽으로 송환된 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용해공(용광로의 벽을 쌓거나 손질하는 노동자)으로 북한에서 생활을 시작
- 전후 북한에선 포로 출신의 경우 대부분 제일 밑바닥으로 취급돼 좋은 직장을 갖기 어려웠고 게다가 남한 출신이라는 점은 큰 장애요인일 수밖에 없었음. 진씨가 어려운 처지를 벗어날 계기를 잡은 것은 1956년 12월28일 당시 김일성 주석이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찾았을 때 기업소 간부, 모범 노동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진씨는 용광로의 용해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건의함으로써 이후 '천

리마운동'의 모범으로 북한 사회에 선전되었음.

北학생들, 출근길 부모에 꽃다발·합창 격려(1/8, 조선신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 말 1950년대 '천리마운동'의 전통을 계승해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주문하고 신년 공동사설이 이를 강조한 데 이어 "대대적인 선전 깜빠니아(캠페인)"가 북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음.
- 조선신보는 8일 겨울방학을 맞은 중학교(중고교 과정), 소학교 학생들이 가창대와 취주악대 활동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력적 혁신을 호소하는 다양한 사회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꽃다발을 흔들며 힘찬 합창으로 부모형제들의 출근길을 고무해 주고 있다"고 보도
- 또 "도시와 마을의 곳곳에" 신년 공동사설의 취지를 설명하는 전시물들이 나붙었고, "아침, 저녁마다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선전이 박력있게 벌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하며 이 캠페인의 "중심 내용은 천리마 시대 혁명적 대고조의 전통을 계승하려 경제건설의 모든 부문들에서 일대비약의 폭풍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

개성시 인민위원장에 박용팔 임명(1/8,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개성시 인민위원장에 박용팔 전 황해북도 서흥군 인민위원장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됨. 조선중앙방송은 8일 신년 공동사설에 대한 "반향" 방송을 내보내면서 박용팔을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호칭
- 개성시 인민위원장은 전임 김일근 위원장이 개성공단 현장 총책임자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었음. 개성시가 지리적으로 황해도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정에 밝은 박용팔 위원장을 임명한 것으로 보임.

  * 김일근 전 위원장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영접했으며, 2003년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에도 선출돼 개성시 인민위원장 자리가 정치적으로도 비중이 있는 위치임을 보여줌.

北, 3월8일 대의원 선거 실시(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6일 전원회의를 열어 대의원 선거에 대한 결정을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2009년 3월8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다"며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전원회의 참가자들의 일치한 지지 속에 성과적으로 채택됐다"고 보도, 통신은 "회의에서는 각급 인

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날짜를 2009년 1월7일(수요일)에 통신과 신문, 방송으로 전문 보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임.

- 이번에 새로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면 김 위원장을 다시 국방위원장에 추대할 것으로 예상돼 '김정일체제 3기'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짐.
- 제12기 최고인민회의는 구성 즉시 올해 예결산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국방위원회 위원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내각 등의 인사문제도 다룰 것으로 전망돼 북한 권력 엘리트의 세대교체 등 변화 여부와 그 방향, 후계구도와 연관성 등이 주목됨.
- 대의원 선거 실시 결정과 관련,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것임. 북한이 이처럼 대의원 선거 실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한 것은 북한의 선거가 비민주적이라는 외부의 비판을 의식해 정해진 정책결정 시스템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

○ 北, 장관급 9명이상 교체(1/5, 조선중앙통신; 연합)

- 북한이 최근 개각(改閣)을 통해 9명 이상의 장관급을 교체하고, 인민군과 노동당의 핵심 보직에도 일부 변화를 준 것으로 5일 확인됐음.
- 북한 매체가 최근 장관급인 금속공업상을 김태봉으로, 전력공업상을 허택으로 보도한 것을 포함해 "철도상에 전길수, 임업상에 김광영, 무역상에 이용남이 각각 새로 기용됐다"고 통일부가 발표, 정부 당국자는 "이들 5개 부처 외에 상업성·재경성·수산성·민족경제협력위원회 등 4개 부처의 장관도 바뀐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후임자 이름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언급, 확인된 장관급 교체율만 전체 내각(37개)의 25%에 달하는 규모로써 당국자는 "최근 북한 개각의 특징은 경제관련 부처 장관을 대부분 교체했다는 것과 내부 승진자가 많다는 것"이라고 평가
- 조선중앙통신은 또 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포병사령부 산하 부대 현지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포병사령관을 "리정부 상장"이라고 보도함. 종전의 포병사령관은 정호균 상장이었음.

다. 경제 관련

○ 北, 中과 교역강화, 단둥에 출장소 첫 개설(1/11, 연합)

- 북한이 중국과의 최대 교역 창구인 중국 단둥(丹東)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영사 출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11일 확인,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의 주 선양(瀋陽) 총영사관이 최근 단둥에 출장소를 개설하고 직원을 상주시켰다"면서 "이는 북중 무역 활성화와 중국을 통한 물자 조달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북한 주민 관리 등 영

사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언급, 비록 규모가 작은 출장소이긴 하지만 공식 외교공관이 단둥에 들어선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임.

- 북한은 북중 교역 물자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단둥에 출장소 개설을 중국 당국에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수교 60주년과 맞물려 북중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가운데 이번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원산청년발전소 준공식(1/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002년 10월 착공한 강원도 원산청년발전소 준공식이 10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준공식에는 김영일 내각 총리와 박남기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광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관계부문 일꾼과, 건설자, 근로자들이 참가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원산청년발전소 건설에 동원됐던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7일 감사문을 보냈다고 통신은 보도
- 원산청년발전소는 평양-원산간 관광도로 사이의 무지개동굴 평양쪽 입구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36㎞ 떨어진 곳에 건설됐으며 총 6만㎾의 발전능력을 갖췄음.

평양제사공장, 연내 설비개조 완료(1/10, 조선신보)

- 북한의 대표적 섬유공장인 평양제사공장이 올해 안으로 생산공정 현대화를 완료할 방침이며, 설비 현대화가 완료되면 비단실 생산량은 2.7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10일 보도
- 한편,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인민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생활필수품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것"을 경공업 부문의 과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 평양제사공장은 "날마다 하루 계획을 150%로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

美 대북 지원식량 6차분 남포 도착(1/10,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식량 50만t 중 6번째 선적분인 옥수수 2만1천t이 8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
- VOA는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비정부기구(NGO)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 국적선 '이스턴 스타'호가 남포항에 도착해 현재 하역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언, 이번 선적분은 당초 지난 3일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기상과 바다 상태 때문에 도착이 늦어졌다고 VOA는 설명
- 대북지원 식량은 머시코, 월드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5개 미국 NGO들이 평안북도와 자강도 내 25개 군에서 분배할 예정이라고 VOA는 보도

  * 미국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이 시작된 2008년 6월부터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옥수수와 밀, 콩 등 곡물 14만3천330t을 전달, 이 중

4만5천260t은 NGO들을 통해 분배됐고 나머지 9만8천70t은 세계식량계획(WFP)이 함경남·북도, 량강도, 강원도,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평양 등 8개 지역에 분배

北, 석탄증산 투쟁 선전(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의 한 산업으로 중시하는 석탄 분야에서 신년 공동사설을 관철하기 위한 증산 투쟁이 벌어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
- 평안남도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는 "채탄 노력을 보강하고 설비, 자재 보강"을 통해 석탄 증산에 나섰고, 2.8직동청년탄광과 천성청년탄광은 "연속천공, 연속발파로 굴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통신은 소개
- 통신은 석탄공업성이 "화력발전소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해 막장 설비와 동발나무(광산의 갱목), 각종 부속품들을 보장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각지 탄광 노동계급의 노력에 의해 석탄 생산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

중유사용 北동평양발전, 작년 1.3배 증산(1/8, 조선신보)

- 북한의 평양시와 평안남도 일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북한 동평양화력발전소가 2008년 전력생산을 2007년에 비해 1.3배로 늘렸다고 조선신보가 8일 보도
- 조선신보는 이 발전소의 전력 증산 이유에 대해 "1980년대에 도입한 동평양발전소의 설비는 한때 (석탄)연소율이 91%로 떨어졌는데 발전소가 자체의 힘으로 기술개건(개선)을 다그쳐 작년말까지 95%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을 꼽음.
- 그러나 북한의 다른 화력발전소에선 중유를 불을 붙이는 착화 연료로만 사용하고 발전의 기본 연료로는 석탄을 이용하는 데 반해, 동평양발전소는 중유를 주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북핵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른 6자회담 참여국들의 대북 중유 제공도 전력 증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대가로 지원키로 한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가운데 미국은 중유 20만t 지원을 완료했고 러시아는 20만t 중 15만t, 한국은 20만t중 14.5만t을 각각 지원했으며 중국은 중유 10만t 상당의 발전설비 자재 등을 지원했음.

北 평양 운수기업소서 버스조립 추진(1/7, 조선신보)

- 북한 평양시여객운수연합기업소가 버스 수리공장에서 중형버스와 화물자동차를 조립생산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7일 보도
- 조선신보는 평양시의 대중 교통망 개선 사업 소식을 전하면서 평양시여객운수연합기업소가 "버스 수리공장에 새로운 생산공정을 구축

해 중형 버스 및 화물자동차들을 조립생산할 높은 목표도 세웠다"고 보도

北철도성, 철도 중량화·통신망 구축 주력(1/7, 조선신보)

- 북한 전길수 철도상은 2012년까지 철도 중량화를 통해 수송능력을 높이고 철도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전 철도상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철길의 강도를 높여 철도의 중량화를 실현하는 사업에 계속 주력한다"며 "2012년까지를 주요 철도망의 철도 중량화를 완결하는 해로 정하고 끈기있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언급

北화학공업성, 화학비료 생산정상화 주력(1/6, 조선신보)

- 북한의 한승준 화학공업성 부상은 2008년 "각종의 화학비료와 농약, 시약문제의 해결에서도 전진이 있었다"며 북한이 강성대국 달성 목표 해로 정한 2012년까지 화학비료의 생산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언급
- 그는 6일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는 국내원료에 의한 무연탄 가스화공정이 마감(마무리)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것이 완성되면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해 오던 일부 화학비료들을 국내 자체의 힘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

김정일 비자금관리인이 娘회사 투자 유치(1/6, 연합)

- 이집트의 대표적인 기업이자 아랍권에서도 손꼽히는 오라스콤 그룹이 최근 이동통신과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대북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리 철 스위스주재 대사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짐.
- 대북 소식통은 6일 "휴대전화 개통, 류경호텔 공사 재개, 합작은행 설립 등 오라스콤의 대북 투자는 리 철 대사가 직접 나서 오라스콤과 거래한 사업"이라며 "리 대사의 지시를 받아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관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밝혔음.
- 리 철 대사는 1980년부터 스위스 제네바대표부 공사와 대표, 스위스 주재 대사로 활동하면서 김 위원장의 비자금 관리와 김 위원장과 그 가계의 사생활에 관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중 한 사람임. 이러한 임무 때문에 리 대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서기실의 부부장 직책도 겸하고 있음.
- 한편 2008년 12월 15일 '고려 링크'란 이름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북한의 이동통신은 오라스콤이 북한에 건설한 공장에서 생산한 CDMA 단말기로만 통화가 가능하며, 북한 외에서 구입한 타회사의 단말기로는 통화가 안되는 것으로 알려짐. 대북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고위층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방

침이지만, 간부들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북한 원화로 싸게 살 수 있는 반면 일반 주민은 500달러 안팎의 비싼 값때문에 구입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 북한은 오라스콤의 단말기를 도입하면서 특히 통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北, 5개년 경제계획 추진 중(1/5, 조선신보)

-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 연차 계획"을 수립해 각 부문마다 설정된 "구체적인 도달 목표와 달성 수치"에 따라 생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5일 보도

北, 작년 4.4분기 추첨제 저금 추첨행사 개최(1/4, 조선중앙TV)

- 북한이 주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추첨제 저금의 2007년 4.4분기 저금 추첨행사를 최근 평양시 강남군에서 가졌다고 조선중앙TV가 4일 보도
- 중앙TV는 이번 추첨에서 1등 1개, 2등 2개, 3등 20개의 번호가 당첨됐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당첨액수는 밝히지 않음.

라. 사회·문화 관련

北 2008년 경기 신기록 30여개 수립(1/10, 조선신보)

- 북한 체육선수들은 2008년 국내 경기대회에서 역기(역도), 육상, 사격, 활쏘기(양궁), 수영 등의 종목에서 30여 개의 신기록을 세웠다고 조선신보가 10일 보도

국제사회 대북 의료지원 새해도 계속(1/9, 자유아시아방송)

- 결핵을 비롯해 북한의 열악한 보건 의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사업이 올해도 적극 추진될 전망,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에서 결핵 퇴치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 민간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은 지난 주 결핵약을 포함해 각종 의약품과 의료장비, 식료품 등을 북한으로 보냈으며 이에는 병실과 수술실 개선용 전력 장비와 부품 등 의료장비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이 단체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협의한 결과 WHO도 "북한에서 필요한 결핵약의 보급이 늦어질 경우 사망자가 늘어나고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올해도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다"고 소개
- 유엔아동기금(UNICEF)도 지난 수년간 북한 주민의 90% 이상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의료 사업을 더 강화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예산도 추가 요청할 계획"이라고 UNICEF 고팔란 발라고팔 평양사무소 대표는 언급

- 2008년 미국의 4개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병원 10여곳의 의료개선 사업에 400만 달러를 지원했던 미국 정부는 올해도 "북한 의료진에게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 장비를 추가 제공하는 등 의료개선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미 국무부 관리가 밝혔다고 RFA는 보도

○ 北최고도예가 자녀들, 가업 계승(1/8, 조선신보)

- 북한에서 최고의 도예가이자 '고려청자의 대가'로 불리는 고 우치선(2003년 사망)의 자녀들이 "정력적인 창작활동"으로 아버지의 "넋과 기술을 계승"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8일 소개
- 우치선은 1919년 평양시 강남군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처음으로 고려청자를 재현하는 데 성공해 1983년 '공훈 예술가' 칭호를 받고 1989년 '김일성상'을 수상했으며, 2003년 숨졌을 때는 남한의 국립묘지격인 애국열사릉에 묻혔음. 그의 도자기 작품들은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국보적 가치가 있고 세계에 당당히 자랑할 만하다고 최상급의 평가를 받았다"고 신문은 보도
- 신문은 우치선의 딸 복단(47), 아들 철룡(44)씨가 만수대창작사 도자기창작단에서 "고려청자의 높은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고 전하고, 철룡씨는 "고려청자의 전통적 장식기법인 인장무늬를 위주로 적용하면서 독특한 형태와 겹상감 장식기법을 현대 고려청자에 도입한 재능있는 도예가"라고 소개

○ 北TV, 박지성, 혼자 두몫 하는 선수로 소개(1/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가 영국 프로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산소탱크' 박지성을 "혼자서 두 몫하는 선수"라고 높이 평가
- 중계 캐스터가 박지성 선수를 보며 "방금 화면에 나왔던 선수는 아시아 사람과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라고 하자 해설을 맡은 체육과학연구소 리동기 교수는 "13번 박지성 선수"라며 "지금 2010년 제19차 월드컵의 아시아 최종단계 예선경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서 우리가 남조선과 대전하고 있는데 남조선팀의 핵심선수이기도 하다"고 박지성이 남한 축구선수임을 분명히 설명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美·WFP, 식량분배 감시 요원 수 이견(1/6,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정부와 세계식량계획(WFP)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의 분배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한 '한국어 구사 요원'의 숫자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 미국은 대

북 식량지원의 조건으로 북한측과 '한국어 구사 요원'의 규모를 놓고 협의중이나 진통을 겪고 있음.

- RFA는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이 12월 30일 "WFP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감시 요원이 부족한 점이 핵심 문제"라며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조건에는 WFP와 미국 비정부 구호단체에서 활동하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감시 요원'의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WFP측은 분배 감시활동에서 '한국어 구사 요원'의 규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지적, WFP측은 "한국인 출신(ethnic Korean)은 아니지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소수의 요원이 북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요원의 많고 적음이 감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
- RFA는 "WFP측은 현재 미국과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협의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만일 1월 중순까지 미국으로부터 식량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는 운반 차량, 식량 저장고, 식품 공장 등 각종 지원 사업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힘.

나. 북·중 관계

○ 中외교부 대표단 방북(1/9, 조선중앙통신)

- 후정웨(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외교부 대표단이 9일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그러나 통신은 대표단의 방문 목적이나 일정, 공항에서의 영접인물 등은 밝히지 않음.
- 중국 외교부 내 4명의 부장조리 가운데 한 명인 후 부장조리는 아시아지역, 조약·법률 담당임. 그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아시아국 국장을 거쳐 2008년 7월 말 부장조리에 임명됐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외교관 경력을 쌓은 '동남아시아통'임.

○ 김일성 전우, 中항일여걸 영결식 거행(1/7, 충칭만보)

- 김일성 주석의 전우이자 중국 항일전쟁의 영웅인 후전이(胡眞一)가 6일 충칭(重慶)시 난산(南山) 룽위안(龍園)에 안장됐음. 7일 중국 충칭만보(重慶晚報)에 따르면 2008년 9월14일 사망한 후전이의 영결식장에는 검은색 양복 차림의 최경 주중 북한대사관 참사와 김영일 주중 북한대사관 수석1등비서가 참석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후전이 영결식장에 특별히 조문객을 파견한 것은 후전이가 김일성 주석 생존 당시 해방 이후 소재지를 찾을 정도로 절친한 '전우'였기 때문임.

다. 북·일 관계

北, 조총련 탄압 묵인 안할 것(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북한과 일본간 국교가 없는 상황에서 "(조)총련이 공화국(북한)의 대표부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조총련에 대한 일본 당국의 수사 등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 칼부림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비난
-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조총련에 대한 "탄압"은 일본이 지난해 납치문제 등을 내세워 북한 "고사작전"을 펼치는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을 더 "악랄하게 실행"한 연장선이라고 주장, 이어 신문은 "일본 반동들의 반총련 책동을 묵인하면 그들은 더욱 오만하게 날뛰게 되므로 적대시 책동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로 스쳐보내서는 안되며 단호히 분쇄해버려야 한다"고 언급

라. 기타외교 관계

네팔주재 北대사관, 면세석유 대량구입 의혹 제기(1/8, 텔리그래프 위클리; 1/9, 자유아시아방송)

- 네팔 주재 북한 대사관이 외교관의 면세 특권을 이용해 매달 추정 소비량 이상의 석유류를 대량 구입해 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네팔 언론보도를 인용해 보도
- 네팔 영문 주간지 '텔리그래프 위클리'는 8일 "네팔 주재 북한 대사관이 소유한 차량이 4대 밖에 되지 않는데 매달 석유 1만2천ℓ와 경유 1만2천ℓ 등 총 2만4천ℓ의 석유류를 세금을 내지 않고 구입해 오고 있다"고 보도
- '텔리그래프 위클리'는 북한 대사관은 네팔에서 아무런 협력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면세로 구입한 그 많은 석유제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의문이라고 주간지는 보도

北, 팔레스타인 지지 '연대성 모임' 개최(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북한)-팔레스티나(팔레스타인) 친선 및 연대성 위원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과 관련,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지지, 성원하기 위한 연대성 모임"을 7일 평양에서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모임에는 친선 및 연대성 위원회 위원장인 김병팔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관계부문 일꾼(간부)들이 참가
- 7일 조선중앙통신은 '무엇을 노린 살육 광증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내세워 중동지역에서 도발한 대리전쟁"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싸잡아 비난

3. 대남정세

정부, '통일쌀' 대북반출 승인(1/9, 통일부)

- 정부는 민간 단체가 대북지원 차원에서 추진 중인 '통일쌀' 제공 사업을 승인했다고 9일 발표,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농민본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쌀 지원 사업과 관련, 8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소개
- 6·15농민본부 등은 경기, 강원 등 8개 도에서 직접 재배하거나 민주노총의 모금을 통해 사들이는 방법으로 마련한 통일쌀 162t 4천313가마를 9일 중 인천-남포 항로를 통해 보냄.

정부, 대북 삐라 북한돈 살포 입장 피력(1/9, 통일부)

- 통일부 김 대변인은 일부 민간단체들이 북에 삐라와 함께 북한돈을 뿌리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언급, "북한화폐는 허가를 받아야 반입할 수 있는데, 만약 교역업자가 세관을 거치지 않고 반입했다면 밀수가 되는 것"이라며 "법집행에 관한 권한은 세관이 가지고 있다"고 언급, 그는 그러나 "북한화폐를 반입해 전달살포에 사용하는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평양 남북경협 업체 100곳 정상가동 중(1/9, 연합)

- 북한이 2008년 12월 군사분계선 통행을 엄격히 제한한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사업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평양 시내의 남북경협 업체 약 100곳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평양에 남북 합영회사인 평양대마방직을 세운 안동대마방직의 김용현 이사는 9일 "평양에는 의류 임가공 중심으로 약 100개 남북 경협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11,12월엔 상황이 좀 심각했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언급하며 "남북관계가 더 악화돼 북한이 전면 차단하는 일만 없다면 공장 운영에 문제 없다"고 덧붙힘.
- 지난 10월말 준공식을 가진 평양대마방직공장은 원자재를 확보하는 대로 오는 3월부터 정상가동할 계획이라고 김용현 이사는 밝히며 "평양대마방직 공장의 제품가운데 남한에 들여올 수건, 양말같은 것은 중국 제품보다 단가를 싸게 국내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안동대마방직측은 평양대마방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수준을 놓고 아직 북한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개성공단 생산액 5억달러 돌파(1/8, 통일부)

- 2008년 말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액이 5억달러를 넘어섰음. 8일 통일부에 따르면 2008년 1~11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산액은 2007년 같은 시기 1억6천538만달러에 비해 39% 증가한 2억2천918만달러를

기록, 이로써 개성공단이 실질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2005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누적 생산액은 5억261만달러가 됐음.

- 한편 개성공단에서 가동중인 기업과 북측 근로자 수는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93개, 3만8천931명으로 집계돼 작년 1월 66개 업체, 2만2천778명에 비해 기업수에서 41%, 근로자 수에서 71% 늘어났음.

경기2청, 남북협력사업 확대(1/7, 경기도)

- 경기도 제2청은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올해 남북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 도(道)2청은 2008년에 이어 개성 개풍양묘장 사업, 산림 병해충방제, 말라리아 공동방역, 공동 벼농사 등을 추진키로 함.

北문영호, 내외정세 불구 '겨레말큰사전' 완성(1/7, 조선신보)

- 남북한 언어학자들이 함께 편찬 중인 '겨레말큰사전'의 북측 편찬위원장인 문영호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장은 "내외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겨레말큰사전을 민족의 통일 발전에 기여하는 특색있는 사전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신보가 7일 보도
- 문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 정책에 의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도 중도반단(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
- 문 위원장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학술적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며 "겨레의 넋을 지키고 민족 분열의 위기를 타개하며 문화의 단일성, 언어의 단일성을 실현하는 것은 통일시대에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

北, 휴대폰 반입시 압수·복귀조치(1/7, 통일부)

- 북한은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가져 온 방북자가 적발되면 즉시 남으로 돌려보낼 것이며 자진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기까지 압수하겠다고 통보, 북한 통행검사소는 지난 5일 이같이 강화된 단속 지침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7일 발표
- 북이 통보한 지침은 휴대전화를 소지한 방북자가 소지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전화기는 압수하지 않고 즉시 돌려보내며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전화기 압수 및 즉시 복귀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개성공단에서 나오다 적발될 경우 전화기를 압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음.

북한연구실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핵무기 폐기는 북미 국교수립 후"(1/10)

- 북한은 6자회담의 종착점인 핵무기 폐기와 관련, 미국과 국교를 수립해 핵공격을 받을 위협이 사라진 뒤에야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의 한 고위관리가 작년 11월 미 싱크탱크 주최 토론회에서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0일 보도했음.
-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의 폐기는 6자회담 비핵화 프로세스의 마지막인 3단계 과제로, 이 관리는 북한의 핵계획 신고를 검증하는 문서가 완성돼 협의가 최종단계에 들어가더라도 북미간 국교수립 전에는 스스로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미국측에 못을 박았다고 이 통신은 전했음.
- 지난해 11월 7일 뉴욕에서 전미외교정책회의(NCAFP)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북한에서 6자회담 차석대표인 리근 외무성 미국장 등 6명, 미국측에서 성 김 6자회담 특사,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5명의 전직 대사, 그리고 버락 오바마 차기대통령의 외교정책에 관여하는 상원외교위원회 스태프들이 참석했음.
- 북미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고위관리는 북한측 참석자를 대표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미국의 핵 위협을 느끼지않게 된다면 단 한개의 핵무기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며 국교정상화를 통해 안전을 보장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보였음.
- 북한측 참석자들은 대화를 기본으로 하는 현재 미국의 북한정책이 오바마 정권 아래서도 계속되기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대해 미국측은 제2단계를 계속 늦추게 되면 "(6자회담에 대한) 미국내의 지지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통신은 밝혔음.

○ 中 "6자회담 난관 봉착" 인정(1/8)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자들의 우려와 관련, "중국 역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동북아의 평화 안정, 화해를 희망한다"면서 "최근 6자회담이 일련의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했음. 친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 수석대표 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 이번이 처음임.

- 친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은 다른 당사국들과 공동 협력해 6자회담의 진전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2단계 남은 행동을 마무리함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달 8일부터 4일간 베이징에서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를 열었지만 북핵 검증 합의를 이루지 못해 6자회담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음.

네그로폰테 "對中외교 핵심은 6자회담과 경제"(1/8)

-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은 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끌 새로운 미 행정부 역시 북한 핵 문제 타결을 위한 6자회담과 경제 문제를 대중 외교의 핵심 사안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대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을 찾은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이 같은 원칙을 밝혔음.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양국 간 지속적인 관심이 될 이슈 가운데 하나는 명백히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에 있어 진전을 이루기 위한 6자회담을 통한, 또는 양국의 노력"이라고 말했음.
- 또 경제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개방적인 국제 무역과 금융시스템 유지 및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음.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앞서 마친 양제츠 외교부장 등과의 회담에 대해 "중국 측은 미국에 대해 안정적 파트너라는 믿음을 심어주길 원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음.

"北核 새행정부 과제로 남아"<美국무부>(1/8)

- 조지 부시 대통령이 퇴임을 2주 앞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다뤄야만 할 것이라고 7일 밝혔음. 이는 핵 불능화와 관련된 시료채취 등 검증문제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이 앞으로 2주도 채 남지 않은 부시 대통령의 임기 중에 어떤 진전을 보이기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보임.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핵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이 최근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느냐는 질문에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그는 "우리는 분명히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동의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은 여전히 북한 쪽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해 북한이 핵 검증 문제에 대해 미국 측에 어떤 움직임이나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음.
- 우드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우리는 그런 일(북한의 검증의정서 동의)이 일어나길 원한다"면서도 "그것이 다음 2주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그러나 북한 핵 검증 문제는 새 행정부가 다루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 문제가 어디

로 가게 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北, 오바마 정부와 핵재협상 시도할 것"<해들리>(1/8)**

-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북한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재협상 시도 등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를 출범 초기에 시험하려고 들 것이라고 밝혔음.
- 해들리 보좌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 앞서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을 통해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분열을 시도하거나 북핵 재협상 시도 등을 통해 새 행정부를 다시 한 번 시험하려고 들 것"이라며 "북핵회담은 차기 행정부 초기의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하지만, 그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이러한 초기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면 북한은 검증협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불능화 검증과 핵시설 해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해들리 보좌관은 또 "이러한 북핵 검증 없이는 진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정보당국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핵심은 기존의 동맹 활성화,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형성, 중국의 국제시스템 편입, 테러와 핵확산 위협 대처,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이었다면서 해들리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 호주와 안보동맹을 활성화시켜 이 지역에서 미래의 도전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음.
- 그는 중국과도 협력에 기초해 더 강력한 관계를 형성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또 인권과 종교 자유문제에 대해 계속 압력을 행사해 나갈 것이라면서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도 긴밀한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덧붙였음.

나. 미·북 관계

○ **"美 2월말까지 대북정책 재검토 끝낼 것"<RFA>(1/10)**

-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빠르면 2월 말까지 대북정책 재검토를 끝내고 북한과 다시 핵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이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했음.
- 그는 RFA와 인터뷰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대북정책의 기조는 차기 행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음. 그는 또 "엄격한 검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민주, 공화 양당 간에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도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의 핵 개발계획 검증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음. 그는 오바마 정부 아래에

서 북핵 협상이 진전을 이룰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6자회담 참가국 간 균열을 조장해 회담의 틀을 깨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고 RFA는 전했음.

- 그러나 리스 전 국장은 새 정부가 북한에 대해 '당근' 대신 '채찍'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의 전망에 대해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외교적 접근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음.
-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이란의 핵개발 문제 등에 비해 북핵 문제가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며 "미국은 이미 북핵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확고한 정책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시급한 상황을 먼저 해결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RFA는 덧붙였음.
- 현재 윌리엄 앤드 메리대 교수로 재직 중인 리스 전 국장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발족에 깊이 관여한 비확산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고위급 대북특사직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음.

"美 대북 지원식량 6차분 남포 도착"<VOA>(1/10)

-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식량 50만t 중 6번째 선적분인 옥수수 2만1천t이 8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했음.
- VOA는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비정부기구(NGO)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 국적선 '이스턴 스타'호가 남포항에 도착해 현재 하역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음. 이번 선적분은 당초 지난 3일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기상과 바다 상태 때문에 도착이 늦어졌다고 VOA는 설명했음.
- 대북지원 식량은 머시코, 월드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5개 미국 NGO들이 평안북도와 자강도 내 25개 군에서 분배할 예정이라고 VOA는 덧붙였음.
- 미국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이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옥수수와 밀, 콩 등 곡물 14만3천330t을 전달했음. 이 중 4만5천260t은 NGO들을 통해 분배됐고 나머지 9만8천70t은 세계식량계획(WFP)이 함경남북도, 량강도, 강원도,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평양 등 8개 지역에 분배했음.

체니 "北, 시리아 원자로 건설 도왔다"(1/9)

-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은 이스라엘이 2007년 핵시설로 추정하고 폭격한 시리아 지역내 원자로 건설을 북한이 도왔다고 8일 밝혔음. 백악관이 이전에도 북한 연루설을 주장해왔으나 조지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꺼려왔다는 점에서 체니 부통령의 발언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됨.

- 체니 부통령은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버락 오바마 새 행정부가 신경 써야 할 문제 지역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북한 공산 정권은 핵 야망을 갖고 있으며 "시리아가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을 도왔다"고 언급했음.
- 체니 부통령은 또 미 정부가 경제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과 중앙정보국(CIA)이 테러 용의자를 가혹하게 심문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음.
- 그는 "나는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대담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어느 누구도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테러 용의자를 도청하고 중요 구금자를 심문하는 과정 또한 적법했다는 것이 그의 판단임. 체니 부통령은 오는 20일 정권이 교체되면 앞으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책을 집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국제사회 대북 의료지원 새해도 계속(1/9)

- 결핵을 비롯해 북한의 열악한 보건 의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사업이 올해도 적극 추진될 전망.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에서 결핵 퇴치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 민간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은 지난 주 결핵약을 포함해 각종 의약품과 의료장비, 식료품 등을 북한으로 보냈으며 이에는 병실과 수술실 개선용 전력 장비와 부품 등 의료장비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이 단체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협의한 결과 WHO도 "북한에서 필요한 결핵약의 보급이 늦어질 경우 사망자가 늘어나고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올해도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다"고 소개했음.
- 유엔아동기금(UNICEF)도 지난 수년간 북한 주민의 90% 이상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의료 사업을 더 강화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예산도 추가 요청할 계획"이라고 UNICEF 고팔란 발라고팔 평양사무소 대표는 말했음.
- 지난해 미국의 4개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병원 10여곳의 의료개선 사업에 400만 달러를 지원했던 미국 정부는 올해도 "북한 의료진에게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 장비를 추가 제공하는 등 의료개선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미 국무부 관리가 밝혔다고 RFA는 전했음.

"美, 北미사일대비 'MD군함' 태평양집중"(1/9)

- 미 해군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운용중인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le Defense)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18대 가운데 16대를 태평양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전문지가 8일 보도.

- 디펜스뉴스 인터넷판은 이날 미 해군이 그동안 미사일 공격에 대비, 3대의 순양함과 15대의 구축함에 적의 탄도 미사일을 추적.요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방어능력을 구비토록 성능을 개선,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중 16대가 태평양 지역에, 두 대가 대서양 지역에 배치돼 있다고 전했음.
- 미 해군이 이처럼 BMD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을 태평양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애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디펜스뉴스는 전했음. 태평양 함대에 배치된 BMD능력을 갖춘 이지스함들은 캘리포니아의 샌디애고, 하와이 진주만, 일본 요코스카항 등에 기항하고 있음.
- 한편, 미 해군은 18대의 군함 이외에 2대의 순양함, 1대의 구축함에 추가로 BMD능력을 구비토록 성능을 개선, 조만간 모두 21대의 BMD 이지스함을 구비하게 될 것이라고 디펜스뉴스는 전했음. 이지스함에 BMD능력을 구비토록 하기 위해선 대당 1천만~1천2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음.

美의회, 北위협 강력대응 입법 추진(1/8)

-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가 곧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정부의 주요과제로 넘겨진 가운데 제111회 미 의회가 북한과 이란의 안보위협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음.
-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무장관에 내정된 힐러리 클린턴, 외교위원장 존 케리 의원 등 민주당 중진 20명이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테러위협 및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제정을 주장한 가칭 '2009 미국 국력회복법' 입법을 제안했음.
- 민주당 중진들은 특히 핵개발 및 WMD 생산·확산을 도모하는 북한과 이란이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 북한과 이란의 안보적 도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음.
- 법안은 입법취지 설명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률들을 의회는 입안하고 대통령은 승인·서명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면서 향후 법안이 담아야 할 내용을 소개했음.
- 법안은 미군 장병을 파병하기 전에 적절한 훈련과 장비를 받도록 하고 귀국 후 적절한 지원과 의료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군사능력을 강화하고 장병의 복무와 가족들의 헌신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또 법안은 군사력과 정보력, 국토안보 및 외교 등 포괄적인 전략을 갖고 알-카에다 및 다른 테러조직의 위협에 대처하고 미군이 이라크에서 임무를 전환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음.
- 이어 법안은 미국의 정보력과 외교력, 해외지원능력의 효율성을 증대해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물리치고,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동맹을 강화하며 국제적인 인도주의 및 개발도전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음. 이와 함께 법안은 핵물질과 다른 WMD 위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북한과 이란의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미국의 안보를 확보·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오바마, 北 합의이행 '데드라인' 정해야"(1/7)

-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북핵 6자회담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것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6일 지적했음.
- 보수성향의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와 월터 로먼 연구원은 이날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오바마 당선인에게 보내는 메모'라는 정책제안을 통해 북한이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드라인(시한)을 정할 것을 주장했음.
- 두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도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을 계속 미루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밝혔음. 두 연구원은 또 오바마 차기 정부가 북한에 핵활동과 관련된 '레드라인(금지선)'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들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핵기술을 시리아에 이전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의를 포기함으로써 미국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다른 잠재적인 핵확산자들에게 '위험한 신호'를 보냈다고 지적했음. 이들은 또 북한의 핵신고문제와 관련,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뿐만아니라 우라늄 핵프로그램, 핵확산활동 등에 대해 완전히 신고토록 하고 신고내용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보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북한과 협상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요구조건을 낮춰서는 안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을 준수토록 압박해야 하며, 북한과 협상하는 데 있어 외교는 물론 정보.군사.경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이와 함께 두 연구원은 차기 미국 정부는 북한과 협상하는 데 있어 한국과 철저히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美 대북특사에 셔먼 유력"<넬슨리포트>(1/7)

- 버락 오바마 미 차기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할 대북 특사에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 조정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워싱턴의 정보지 '넬슨 리포트'는 6일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의 자문관을 지냈던 셔먼이 대북특사로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음.
- 셔먼은 오바마 정부 출범 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자문관을 수행하면서 대북 특사직까지 겸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넬슨 리포트는

관측했음.

- 만일 셔먼이 대북특사직을 맡지 않게 될 경우에는 국무부 정책기획 국장을 지낸 미첼 리스 윌리엄 앤드 메리대 교수가 기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리스 교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발족에 깊이 관여한 비확산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음.

"美.WFP, 식량분배 감시 한국어요원 수 이견"<RFA>(1/6)

- 미국 정부와 세계식량계획(WFP)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의 분배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한 '한국어 구사 요원'의 숫자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전했음.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의 조건으로 북한측과 '한국어 구사 요원'의 규모를 놓고 협의중이나 진통을 겪고 있음.
- RFA는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WFP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감시 요원이 부족한 점이 핵심 문제"라며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조건에는 WFP와 미국 비정부 구호단체에서 활동하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감시 요원'의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WFP측은 분배 감시활동에서 '한국어 구사 요원'의 규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음.
- WFP측은 "한국인 출신(ethnic Korean)은 아니지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소수의 요원이 북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요원의 많고 적음이 감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음.

다. 중·북 관계

北,中과 교역강화..단둥에 출장소 첫 개설(1/11)

- 북한이 중국과의 최대 교역 창구인 중국 단둥(丹東)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영사 출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11일 확인됐음. 이에 따라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우호의 해'로 지정된 올 한해 단둥을 통한 북중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은 이날 "북한의 주 선양(瀋陽) 총영사관이 최근 단둥에 출장소를 개설하고 직원을 상주시켰다"면서 "이는 북중 무역 활성화와 중국을 통한 물자 조달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북한 주민 관리 등 영사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말했음. 비록 규모가 작은 출장소이긴 하지만 공식 외교공관이 단둥에 들어선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임.
- 북한은 북중 교역 물자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단둥에 출장소 개설을 중국 당국에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수교 60주년과 맞물려 북중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가운데 이번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
- 이에 앞서 대북교역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

회(민경련) 단둥 대표부도 지난해 말 직원들이 대거 교체되고 재정비돼 본격적인 북중 교역을 추진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음.

- 북중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1~7월에만 14억2천300만달러로 집계되는 등 1년 한해 20억달러를 넘겼을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본격적인 교역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20억달러를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제일재경일보의 지난달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허난(河南)성의 이마(義馬)석탄그룹은 최근 북한의 안주 석탄공사와 1천만t의 광산 개발과 120만t 규모의 화학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내용의 개발의향서를 체결했음. 이마그룹은 북한의 안주지역에서 종합 석탄 원료 화학발전소와 선탄장 건설 및 맥석이용 프로젝트 등 종합적인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음.

라. 일·북 관계

○ "舊 일본적군파 북한과도 연대"(1/11)

- 지난 2001년에 해산을 선언한 구(舊) 일본 적군파가 과거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11일 과거 적군파 요원의 기고문을 인용해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북한에 건너간 '요도호' 납치 사건 범인들과 적군파가 접촉했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북한과 직접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처음임.
- 이런 증언을 한 사람은 1978년에 적군파에서 탈퇴한 와코 하루오(和光晴生.60)씨다. 그는 네덜란드 헤이그 주재 프랑스 대사관 점거 사건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 그가 발표한 기고문에 따르면 그는 1974년 베이루트에서 적군파 최고 간부인 시게노부 후사코(重信房子.수감중)씨로부터 북한 당국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게 됐음.
- 1975년에는 시게노부씨 등 2명이 북한에 밀항한 뒤 북한의 주체사상에 근거한 사상 투쟁이란 활동 형태가 조직 내부에서도 생겼다고 그는 지적했음. 이어 1976년에는 적군파 요원 2명이 요르단에서 조사 중 구속돼, 1명이 옥중에서 사망한 사건도 북한 당국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들었다고 와코씨는 주장했음.
- 일본 적군파는 1970년대부터 활동한 일본의 좌파 테러단체다. 1970년 일본 적군파 요원 9명이 승객 등 120여명을 태우고 일본 하네다(羽田)공항을 출발, 후쿠오카(福岡)로 향하던 일본항공 여객기를 납치해 북한으로 망명한 '요도호 사건'으로 세계에 알려졌음. 1972년 적군파 내의 온건파들을 처형하고 경찰과 대치한 사건 이후 테러 대상을 외국으로 돌려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과 유대를 맺고 1970~1980년대에 테러 활동을 벌이다 2001년에 해산을 선언했음.

마. 기타

○ **"네팔주재 北대사관, 면세 석유 대량 구입"<RFA>(1/9)**

- 네팔 주재 북한 대사관이 외교관의 면세 특권을 이용해 매달 추정 소비량 이상의 석유류를 대량 구입해 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네팔 언론보도를 인용해 전했음.
- 네팔 영문 주간지 '텔리그래프 위클리'는 8일 "네팔 주재 북한 대사관이 소유한 차량이 4대 밖에 되지 않는데 매달 석유 1만2천ℓ와 경유 1만2천ℓ 등 총 2만4천ℓ의 석유류를 세금을 내지 않고 구입해 오고 있다"고 보도했음.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강대국 대사관들이 각각 1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면세 특권을 이용해 매달 구입한 석유 및 경유는 최고 5만ℓ인 점에 크게 대비된다고 이 주간지는 지적했음.
- 더구나 이들 나라 대사관은 자국 정부가 자금을 대는 여러 지원사업 현장을 오가고 네팔 각지에 흩어진 정부 기관 관계자들을 만나는 데 차량을 이용하는 반면, 북한 대사관은 네팔에서 아무런 협력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면세로 구입한 그 많은 석유제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의문이라고 주간지는 덧붙였음.
- 이와 관련, 외교관 출신 탈북자들은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은 주요 국가주재를 제외하고는 이미 90년대부터 대사관 운영 경비 대부분을 본부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자체 해결하고 있다"며 "대사관에서는 주류와 담배를 비롯해 외교관의 면세특권으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입해 주재국 시장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되팔아 운영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15일 방위비협정 정식 서명(1/11)**

-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오는 15일 정식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음.
- 외교 당국자는 11일 "유명환 외교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가 15일 외교부 청사에서 방위비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2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음. 한·미는 지난달 17일 협정 문안에 가서명했으며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이 의결됐음.
- 협정안은 연도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책정하되 연도별 인상에 4%의 상한선을 적용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군사건설비를 3년 안에 단계적으로 현물전환

한다는게 골자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커트 캠벨"<AP>(1/9)

- 힐러리 클린턴 신임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국무부에서 남.북한을 관할하는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커트 캠벨 전 국방부 부차관보를 내정했다고 AP통신이 8일 밝혔음.
- 또 지금까지 동아태 차관보를 맡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및 북핵 6자회담 등을 이끌어온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당초 힐러리 지명자로부터 유임을 요청받았지만 이를 사양했으며, 공직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음.
- AP통신은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힐러리가 리처드 홀부르크 전 유엔대사를 파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 담당 특보에,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중동평화 협상을 이끌었던 데니스 로스를 중동 및 이란담당 특보에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음.
- 또 힐러리는 윌리엄 번즈 정무담당차관과 패트릭 케네디 관리담당차관을 유임하고 동아태 차관보에 커트 캠벨 전 국방부 부차관보를, 유럽 차관보에 필립 고든 전 국가안보회의(NSC) 유럽국장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에 앤-마리 슬로터 프린스턴대 교수를 각각 내정했음. 앞서 힐러리는 2명으로 늘어난 국무부 부장관에 제임스 스타인버그와 제이콥 류를 각각 내정했음.
- 캠벨 동아태 차관보 내정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냈고 공직을 떠난 뒤 '신미국안보센터'와 '스트랫아시아'를 설립, 정책자문을 해왔으며 특히 민주당 경선과정에선 힐러리에게 외교안보 정책조언을 했고, 오바마 정권인수팀에서도 활동했음. 캠벨은 캘리포니아대학을 졸업했고,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구 소련의 에레반대학에서 음악과 정치학 과정을 이수했음.
- 이에 따라 차기 미국 정부 국무부의 한반도 관련 정책은 힐러리 장관 - 스타인버그 부장관 - 번즈 정무차관 - 캠벨 차관보 라인이 담당하게 될 전망.

해군총장, 군사협력 논의차 美방문(1/8)

-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이 한.미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9일 미국을 방문. 해군은 정 총장이 미 해군의 공식초청에 의해 7박8일 일정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와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8일 밝혔음.
- 정 총장은 이번 방미에서 국방성과 태평양사령부, 이지스 전투체계 교육훈련센터 등을 방문할 계획이며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 그레이로헤드 해군참모총장, 로버트 윌러드 태평양함대사령관 등 미군 핵심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
- 그는 이들과의 회동에서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 해군간 우호협력

증진방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 이지스함 운용능력 향상방안, 국제적 해양안보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해군은 설명했음. 특히 이번 방문중 미측이 소말리아 함정파견을 포함한 한국군의 국제적인 기여방안에 대해 거론할지 주목됨.

- 미 해군은 예우차원에서 정 총장 방미 기간을 '한국 해군의 날'로 선포하는 한편 방문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해군은 전했음. 정 총장은 워싱턴의 알링턴 국립묘지와 한국전 참전 용사비도 참전함.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상 막바지(1/5)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총괄하는 PMC(종합사업관리업체)가 작년 말 용산기지를 2014년까지, 미 2사단을 2016년까지 각각 이전하는 최종안을 양국에 제시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 국방부 관계자는 5일 "PMC에서 작년 12월 용산기지를 2014년까지, 미 2사단을 2016년까지 각각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해 한미 군당국이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하지만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미 2사단 이전 시기를 놓고 2014년까지 이전을 주장하는 한국과 2016년을 고수하고 있는 미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임. 국방부는 작년 12월에 제출된 PMC의 제안서가 최종안이라고 못박은 만큼 2사단 이전시기에 대한 양측 당국 간의 최종 절충만 남은 셈. 그러나 양측 간 협상은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임.
- 미측이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미 2사단의 2014년 이전 완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치려면 연간 6억 달러의 (자체)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연간 3억 달러 밖에 확보할 수 없어 이전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애초 이전 시기보다 2년이나 늦어진데다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미측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기 때문에 미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미측이 주장하고 있는 기지 이전을 위한 미 의회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측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 문제는 현재 미 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동두천과 의정부는 물론 옮겨갈 평택지역의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란 현실적 요소. 이미 2012년 이전을 전제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터에 더 이상 미룰 경우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 이는 우리 군의 신뢰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방부로서도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음.

李대통령 외교자문단 내일 방미(1/5)

-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분야 자문단이 오는 20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학자들과 미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6일 미국을 방문함.

- 방미단은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과 김성한 고려대 교수 등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자문단 소속 학자 중심으로 구성됐지만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위성락 외교통상부 장관 정책특보 등 정부 관계자도 포함됐음.
- 방미단의 한 관계자는 5일 "반관반민의 '1.5트랙' 성격"이라며 "주로 미국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나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나. 한·중 관계

"햇볕정책 지속 불가능했다"<中전문가>(1/7)

- 북한문제 전문가로 유명한 장롄구이(張璉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6일자 동방조보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남북간의 경색이 한국 정부가 햇볕정책을 포기한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보다는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 흐름에서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음. 과거 한국의 전임 대통령들은 대북 햇볕정책을 실시, 남북 정부간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했고 한반도 정세를 완화시켰지만 남북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으며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그는 지적했음.
- 그는 먼저 정치와 외교 측면에서 남북간에 평등을 잃었다고 지적했음. 정상회담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회담시간, 장소, 의제 등 기술적 문제는 물론 협력교류의 진퇴도 북측이 주도했음. 반면 경제협력은 남측이 일방적으로 지불했음. 지금까지 합의한 모든 협력사항은 남측이 비용을 지불했고 금강산 관광도 남측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음.
- 안보측면에서도 남측이 날로 불리해지고 있음. 한국 전임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대북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실시, 남측의 거액의 자금이 각종 명목으로 북에 지원됐음. 지난 10년은 북한이 미사일 계획과 핵 계획을 고속으로 추진한 시기. 2006년 10월 북한은 핵무기 실험 후 한국에 대해 날로 강경해지고 있고 '핵 전쟁', '불바다' 등 극단적 언행을 일삼고 있음.
- 한국의 햇볕정책은 지원과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었음. 하지만 남북한의 사회구조가 달라 10년간 남측이 북측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지만 북측이 남측에 미친 영향은 급증했음. 오늘날 한국사회에 '반북' 등 정치세력이 나타나 한국사회를 분열시키고 동요시키고 있음. 장 교수는 지난 10년 한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긴장국면을 완화시켰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잃었고 '평등과 상호이익'이라는 건강한 상태를 이루지 못해 지속 불가능한 것이었다면서 한국의 새 정부가 이에 대해 조정을 가한 것은 필연적

인 것이었다고 지적했음.

다. 한·일 관계

○ 李대통령 "아소 총리와 첫 골프 쳤으면"(1/11)

-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 太郎) 일본 총리는 11일 청와대에서 양국 경제인들을 공동 접견하는 것으로 올해 첫 한일 정상외교의 첫단추를 꿨음. 두 정상은 이날 접견에서 전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를 한목소리로 강조했으며, 양국 경제인들도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하며 협력 필요성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음. 특히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하는 골프 라운딩을 약속하는 등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했음.
-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위기에 언급, "세계가 많이 변했다.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한일 양국이 이렇게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위기극복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양국은 자유무역이라는 같은 가치관을 가진 나라로 강력한 협력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양국이 FTA를 포함해서 가능한 것부터 실질적인 협력을 하는 게 좋다"면서 "녹색산업이나 미래산업에 대해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음. 또 이 대통령은 "아소 총리가 연초에 방문했기 때문에 총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저도 일본을 가려 한다"고 농담한 뒤 "저도 대통령이 돼서 골프를 못쳤고 아소 총리도 각료 되고 못쳤다고 하는데 여기 재계 인사들과 같이 치면 좋겠다"면서 "(이런 것이) 실질적 협력을 위한 가슴을 여는 진전"이라고 말했음.
- 이에 아소 총리도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향후 세계를 무대로 한 양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협력 확대를 요청했음.
-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접견에서 참석한 경제인들은 양국 재계대표 간담회 성과를 두 정상에게 보고하며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음.
-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양국 경제가 통합되도록 양국 FTA 교섭을 빨리 재개하도록 논의했다"면서 ▲관광산업 진흥 및 인적교류 확대 협력 ▲보호무역 방지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 포럼 설립 ▲녹색성장 분야 협력 ▲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부품구매전시회 개최 등 합의 내용을 전했음.
- 미라타이 후지오(御手洗 富士夫)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회장은 두 정상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호주의에 빠질 게 아니라 계속 자유무역체제를 견지하는 명확한 자세를 표명해 달라"면서 "특히 WTO(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라운드(DDR) 협상 조기 체결과 한일 F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음.

- 두 정상은 이어 열린 만찬에서 지난해 합의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호를 다짐했음.

李대통령 "韓日 과거 직시하며 미래봐야"(1/11)

-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한일 양국은 대전환기를 맞아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해야 하며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음.
-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방한 중인 아소 다로(麻生 太郎) 일본 총리와 가진 만찬에서 만찬사를 통해 "조선후기 최대 지성인 다산 정약용은 당시의 편견과 명분론에서 벗어나 일본을 보고 배우려 했고 그에 앞서 일본의 유학자 사토 나오가타 역시 동아시아의 지적 보편성을 강력히 추구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음.
- 이 대통령은 또 "올해는 양국이 합의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금년초 출범하는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협력의 미래비전이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음.
- 이 대통령은 "전례없는 금융.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신흥경제를 대표하는 한국과 선진 경제를 대표하는 일본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 금융질서를 만드는데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음.
- 이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에 추진중인 부품소재산업 분야 등에서의 경제협력도 착실히 진전돼 나가길 희망한다"면서 "양국은 앞으로 양자 협력을 넘어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테러리즘 등 당면한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공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음.
- 아소 총리는 답사에서 "일본에선 1년 계획을 정초에 세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새해에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면서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일한 양국이 아시아의 양대 민주주의, 양대 선진국으로서 협력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음.
- 아소 총리는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는 것으로는 그럴 수 없고 일이 없어도 만나는 게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증거"라며 "내일 정상회담에서 2009년을 일한 관계에 있어 더욱 비약적인 해로 만드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음.

李대통령 "한일FTA 포함, 실질적 협력해야"(1/11)

-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일본과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문제를 포

함해 가능한 것부터 실질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긍정적인 검토를 넘어 효과적으로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이 대통령은 이날 방한중인 아소 다로(麻生 太郎) 일본 총리와 함께 청와대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회장, 미타라이 후지오 게이단렌(經團連) 회장, 조 후지오 도요타 자동차회장 등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 39명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음.
- 특히 대통령은 "세계가 역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아소 총리와 역내 협력이 중요하고 중국과 함께 한.중.일 3국 간에 자유무역의 가치관을 같이 하는 나라들로서 강력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음.
- 이 대통령은 또 "녹색산업 등 미래산업에 대해 협력할 여지가 많고, 일본이 이 분야에서 앞서 있는 만큼 현재 산업과 미래 산업에 대해 양국이 관계를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한 뒤 "아소 총리가 얘기한 대로 일본의 종합상사와 재계가 제3국에 한국의 상품을 수출하는데 협력하게 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세계가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데 한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검토와 논의를 떠나 실질적인 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음.
- 아소 총리는 "세계에서 동시 발생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불황의 파고에 직면에 큰 타격을 받았으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세계에 구축되지 못했다"면서 "향후 세계를 무대로 일본과 한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음. 아소 총리는 "일한 양국 관계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크게 변화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양국이 손을 잡고 신흥국에 대해 지원해야 하며 국제공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아소 日총리, 한국 청소년들과 만남(1/11)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11일 한국 청소년들과 짧지만 즐거운 만남을 가졌음. 한·일정상회담차 11일 방한한 아소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일 학생미래포럼 소속 한국 고교생 19명과 만났음.
- 한·일 학생미래포럼은 한·일경제협회 주관으로 2004년 시작된 한·일 고교생 교류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만든 모임으로, 2007년부터는 한·일 학생미래회의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
- 아소 총리는 참가자들에게 "고교생 캠프는 제가 외무대신으로 있을 때 계획한 사업인데 이렇게 잘 이뤄지고 있어 기쁘다"며 "한·일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인재로 성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음. 한국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한.일 간 우애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음.

日 외무성 "해저개발 계획에 독도포함 안돼"(1/11)

-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저자원 개발계획에 독도 주변 해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음.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를 수행해 방한한 가와무라 야스히사(川村奉久) 일본 외무성 부보도관은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원에너지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해저자원 개발계획 초안에 다케시마(독도)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음.
- 가와무라 부보도관은 "개발계획의 대부분은 일본의 태평양 지역"이라며 독도가 포함된 것처럼 보이는 지도를 실은 일본 언론의 보도는 틀렸다고 설명했음.
-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6일 일본 정부가 '해양 에너지 광물자원 개발계획' 초안을 만들었다고 보도하며 개발지역에 독도를 포함한 지도를 함께 실은 바 있음.
- 가와무라 부보도관은 일본 정부가 1951년 독도를 영토에서 제외했음을 보여주는 총리부령과 대장성령 등이 최근 발견된 것과 관련, "당시는 미 군정하에서 영토에 대한 주권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던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했음. 그는 12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작년에 복원된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오른다는 의미"라며, 의제로 ▲경제교류와 청소년교류 확대 등 양자현안 ▲국제금융위기 대처, 북한문제, 아프가니스탄 공동지원 등 국제문제를 꼽았음.
- 가와무라 부보도관은 특히 한.일 청소년교류 확대 차원에서 올해부터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의 규모를 작년의 두배인 7천200명으로 확대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소개했음. 그는 아소 총리 방한에 경제인들이 대거 수행한데 대해 언급, "일.한관계가 새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음.

한일재계 아시아 금융협력 강화 논의(1/11)

- 한국과 일본의 재계인사들은 11일 아시아 역내 국가 간 금융협력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이날 오후 한일 정상 셔틀외교의 하나로 방한 중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와 미타라이 후지오(御手洗富士夫) 게이단렌(經團聯) 회장 등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열었음.
-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오찬 환영사에서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국가 간의 금융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EU나 NAFTA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제 만들 때가 됐다"며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이 손잡고 아시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음.
- 조 회장은 "그동안 아시아 지역은 실물경제보다 금융부문이 취약했고, 아시아에서 벌어들인 자본이 역내에 충분히 투자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비하고 아시아의 잉

여자금이 역내에 재투자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음.

- 오찬간담회에는 조 회장을 비롯한 경제 4단체장 등 주요 재계인사 30여 명이, 일본 측에서는 미타라이 후지오 회장과 조 후지오(張 富士夫) 도요타 회장, 미무라 아키오(三村 明夫) 신일본제철 회장 등 19명의 재계 총수들이 참석했음.
- 또 이날 오후에는 경제 4단체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등 20여 명의 경제인과 방한 중인 일본경제인들이 '한일 재계 간 신년간담회'를 갖고 금융위기 이후 양국의 경제현황을 점검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한일 간 협력방안 및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음. 신년간담회에 이어 양국 재계 총수들은 청와대를 방문, 양국 정상과 간담회를 열고 한일 간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환담했음.

한·일정상회담 의제서 독도문제 제외(1/8)

-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2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독도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음. 이와 관련, 외교 당국자는 "독도문제는 외교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우리 땅인데 이를 굳이 의제로 올릴 필요도 없다"고 말했음. 이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독도 문제가 의제로 거론된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음.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경제분야의 실질협력 증진방안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

아소 日총리 방한..12일 정상회담(1/7)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7일 발표했음.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소 총리가 1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면서 "11일 저녁 공식 환영 만찬에 이어 12일 오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음.
-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일관계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한 협력, 금융위기 협력 을 비롯한 경제분야의 실질협력 증진,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음. 양 정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

정부 "독도 포함한 日해저개발 불용"(1/7)

-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계획 중인 해저자원 개발계획에 독도 주변 해역이 포함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음.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7일 "일본 정부에 우리 허가없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자원개발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밝혔음.

- 이 당국자는 "어제 주일 대사관 등을 통해 일본측의 해저자원 개발 계획에 독도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일본측은 '아직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해왔다"고 전했음. 그는 "일본이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독도주변 해저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일본이 우리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개발 대상지역에 포함시킨다면 이 문제는 어렵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한일관계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번 개발계획은 해양 에너지, 광물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개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일본 정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3월에 확정 짓고 4월부터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음. 앞서 일본은 2006년 4월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탐사선을 동원, 동해상의 우리측 EEZ에서 수로측량을 시도하다 우리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음.

日 "구 법령 독도 제외 영토 범위 아니다"<요미우리>(1/7)

- 일본이 패전 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부속 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한 것과 관련, 일본 외무성이 "문제의 법령은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표시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7일 보도. 신문은 외무성 동북아시아과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이렇게 전했음.
- 일본 정부는 일본이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에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는 사실이 한국 언론을 통해 지난 3일 공개된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왔음.
- '총리부령 24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 소유의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한 상위법(정령·政令)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음.
-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치시마 열도(현 쿠릴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등도 부속도서에서 함께 제외돼 있음. 1861년 일본 영토가 된 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관할하다 1968년 6월 일본에 귀속된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오(硫黃) 열도도 빠져 있음.
-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를 정하는 명령'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및 치시마 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을 부속도서에서 제외했음.

정부 "'日 해저개발' 독도포함여부 확인중"(1/6)

-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해저자원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6일 요미우리(讀賣) 신문의 보도와 관련, 개발계획에 독도가 포함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즉각 확인에 나섰음.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주일대사관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해양 에너지 광물자원 개발계획' 초안에 독도가 조사대상 지역으로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음. 일본이 독도를 조사 및 개발 대상지역에 포함시킨다면 이 문제는 어렵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한일관계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 당국자는 "일본이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독도주변 해저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이번 개발계획은 해양 에너지, 광물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개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일본 정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4월부터 이 계획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음.

라. 한·러 관계

주러 대사관, 야간외출 자제 당부(1/6)

- 주(駐)러시아 한국 대사관은 최근 모스크바 시내에서 발생한 한국 여대생에 대한 화상 테러와 관련, 러시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당분간 야간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외교통상부가 6일 밝혔음.
-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러시아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도 "현지 경제상황 악화로 외국인 혐오범죄가 증가하는 시기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노린 흉악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사건"이라고 말했음. 지난 3일 오후 5시께 러시아 모스크바 푸슈킨 언어대학 앞 도로에서 신원 불명의 러시아인 이 대학에서 연수 중이던 A(22.여) 씨 등 뒤에서 온몸에 액체 인화물질을 뿌리고 달아났음.

러' 언어 연수 한국 여대생 인화물질 테러당해(1/6)

- 5일 주(駐)러시아 한국 대사관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께 모스크바 푸시킨 언어대학 앞 도로에서 이 대학에 언어연수 중이던 A(22)씨가 괴한으로부터 화상 테러를 당해 현재 모스크바 시내 한 병원에서 치료 중임.
- A씨는 이날 학교 앞을 혼자 걸어가던 중이었고 갑자기 한 남성이 등 뒤에서 시너로 보이는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달아났음. 이 광경을 목격하던 주변 사람들이 급하게 A씨를 구하긴 했으나 A씨는 등 부위에 화상을 입었음. A씨는 이 학교에서 6개월 과정의 언어 연수를 마치고 오는 2월 귀국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음.

- 주러 한국 대사관 측은 병원에서 2주간의 입원, 치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A씨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를 희망함에 따라 조기 귀국을 적극 돕는 한편 현지 경찰에 철저한 사건 조사를 촉구했음.
- 대사관의 신성원 총영사는 "워낙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A씨는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 조차 모를 정도"라면서 "중국인으로 오인하고 테러를 했을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한국인이 피해를 당한 만큼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적극적인 수사를 약속했다"고 말했음.

마. 미·중 관계

○ 中, 美에 상호 존중.평등 주문(1/8)

- 중국이 중-미 수교 30주년을 맞아 미국에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대만 문제 등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수교 이후 30년간의 양국 관계 발전상을 소개하면서 "위기와 갈등이 없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전향적인 발전을 해왔다"고 강조하고 "양국은 서로 존중하고 평등·호혜의 기초에 따라 서로의 중요한 이익과 관심사를 존중하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음.
- 그는 특히 "중·미 간에는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이란 정책에 따라 대만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음.
- 친 대변인은 "네그로폰테 부장관이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과 양제츠 외교부장과 잇따라 회동하고 시진핑(習近平) 부주석과도 만날 예정"이라면서 "네그로폰트 부장관은 중국 지도자들과의 회동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회동의 논의 내용 등을 차기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 네그로폰테, 다이빙궈.양제츠와 회동(1/8)

- 중국과 미국의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중한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양제츠 외교부장을 잇따라 예방하고 중·미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음.
- 관영 신화통신은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네그로폰테 부장관과 회동, "중미 관계는 지나간 것을 이어받아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면서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과 세계인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 네그로폰테 부장관도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전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대화와 전략경제대화와 같은 중요한 대화채널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싶다"면서 "이같은 의견을

미국 차기 정부에도 전달하겠다"고 말했음.

- 통신은 두 사람이 서로 관심이 있는 국제문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해 북핵 문제와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가자지구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했음을 시사했음.
- 통신은 또 양제츠 외교부장도 네그로폰테 부장관과 별도 회동을 갖고 "양국 관계의 발전은 30년 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것"이라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두 사람은 특히 국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협조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음. 네그로폰테 부장관과 왕광야 부부장은 이날 오후에 열린 양국 선수단간의 친선 탁구대회 행사에 참석했음.

○ 中美, 수교 30년 기념 핑퐁외교 재현(1/7)

- 중국과 미국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베이징에서 이른바 '핑퐁 외교'를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음. 관영 신화통신은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중한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왕광야(王光亞)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이날 오전 회동한 뒤에 오후에 열리는 양국 선수단간의 친선 탁구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7일 보도.
- 이번 행사는 1979년 1월1일자로 양국이 수교하기까지 기틀을 마련한 1971년의 이른바 '핑퐁 외교'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것.
- 핑퐁 외교는 1971년 4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미국 선수단 15명과 기자 4명이 중국 선수단의 초청으로 방중,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면담하고 베이징, 상하이(上海) 등을 관광한 사건으로 20년 이상 적대 관계이던 양국이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한 바 있음.
- 이번 행사에는 선수단 외에 당시 중미 수교 과정에 참여한 원로 외교관과 중국 지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음. 왕광야 부부장은 오전 회동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 과정에 참여한 네그로폰테 부장관이 축하기념 행사에 참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에 노력한 공로에 감사를 표시한다"고 말했음.

○ "네그로폰테, 中 방문시 북한문제 논의"<美국무부>(1/7)

- 미중 수교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대신해 중국을 방문하는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이 7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측 관리들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국무부가 6일 밝혔음.
-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들(네그로폰테 부장관과 중국측 관리들)은 실질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북한과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네그로폰테 부장관이 북핵 검증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진전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음.

- 그는 "네그로폰테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미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만 논의할 게 많이 있다"면서 국제 경제위기 등과 관련된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측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음.
- 매코맥 대변인은 "미중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는 매우 중요한 기념식이어서 라이스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를 원했었다"면서 "하지만 부장관이 자신을 대신해 방문하기로 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음.

○ 中美 외교장관, 중동사태 전화외교(1/6)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5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중동사태 등을 논의했음.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양 부장이 중미 수교 30주년을 맞아 라이스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풍부한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고 6일 보도했음.
- 라이스 장관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미중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미중관계가 계속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음.
- 양 부장은 중동사태와 관련,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당사자들이 군사행동과 무장충돌을 중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중동문제의 근본적인 돌파구는 당자들이 상호 양보의 정신 아래 유엔 결의에 따라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음.

○ 부시 "재임기간 中美 협력 만족"(1/5)

-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4일 재임 기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만족스러운 협력을 해 기쁘다고 말했음.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후 주석과 부시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중미 양국관계와 국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음.
- 중국과 미국 정상들은 30년 전인 지난 1979년 1월1일 국교를 수립한 이후 양국 관계 발전을 축하하고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을 기원했음.
- 미국은 당초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미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보내려고 했으나 중동사태로 인해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을 대신 파견키로 했음. 후 주석은 중미관계에 관한 부시 대통령의 긍정적인 언급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양국 관계의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발전을 위해 기여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음.

- 그는 "중국과 미국은 새로운 역사적 시기를 맞아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발전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이며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전면적인 관계 발전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후 주석은 중동사태와 관련, "중국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가자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도적인 위기사태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이 군사행동과 무장 분쟁을 중단하고 지역 긴장완화에 나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음.

中 "라이스 방중 취소 이해"(1/5)

- 중국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한 중동 문제 때문에 중국 방문을 취소한 것에 대해 "이해한다"고 밝혔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밤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라이스 장관 대신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이 방중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 라이스 장관은 당초 중-미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7-8일 이틀간 방중할 예정이었으나 중동사태가 심각한 국면에 돌입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중 계획을 취소했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4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라이스 장관의 방중 계획 취소를 통보했음.

바. 기타

日아소 내각 지지율 20% 밑돌아(1/11)

-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2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음. 11일 교도통신의 여론조사결과 따르면 아소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6.3%포인트 감소한 19.2%였으며 불신임률은 8.9포인트 늘어난 70.2%에 달했음. 이번 조사는 11~12일 전화설문 형식으로 이뤄졌음.
- 총리로서 누구를 더 선호하느냐는 물음에 46.4%의 응답자가 야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대표를 꼽아 아소 총리라고 답한 22.1%의 두 배가 넘었음. 아울러 51.4%의 응답자는 민주당 내각을 선호한다고 말해 집권 자민당 내각에 대한 지지율 30.5%를 크게 앞질렀음. 소비진작을 위해 2조엔 규모의 정액 급부금을 각 세대에 지급하는 아소 내각의 계획에 대해서는 70.5%가 반대했고 23.7%만 찬성했음. 지난달보다 반대 의견이 12.4포인트 늘어난 데 비해 찬성 의견은 7.7포인트 줄어든 수치. 또한 다수 응답자는 급부금 형식보다 연금이나 의료 서비스 등의 사회보장 지출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음.

싱가포르 야후 한국오류 시정(1/5)

- 싱가포르 야후(sg.travel.yahoo.com)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 사이트(www.protocol.gov.bc.ca)가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잡았음.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측은 "1주일 전까지 싱가포르 야후 사이트는 아시아 소개 지도에서 한국을 중국땅으로 표기했었지만 5일 현재 '한국땅'으로 시정됐다"고 밝혔음. 또 BC주 사이트는 한국의 대통령을 '노무현'으로 표기했던 것을 이날 현재 '이명박 대통령'으로 고쳤다고 전했음.
- 반크는 2일 재외동포와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영토와 역사를 지킬 '21세기 안용복 양성 프로젝트' 사이트를 열었음. 이 프로젝트는 세계 200개 국가에 10명씩의 '안용복'을 길러내 한국을 바르게 홍보한다는 전략에 따라 이뤄지는 것임.

국제관계연구실 제공